

문화

문화정책

■ 개요

2017년 지난 정부 실세들을 줄줄이 구속시키며 정국을 요동치게 한 블랙리스트의 격랑이 문화예술계를 덮쳤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관련 의혹들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부 지원이 중단됐던 예술가나 단체들이 하나둘 복권되고 축소·폐지됐던 지원사업도 복구됐다.

정부는 새로운 문화정책의 기조로 '사람이 있는 문화'를 제시했다. 도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지역 문화의 거점인 중소서점을 살리기 위한 도서정가제를 출판·서점업계, 소비자단체의 협의를 거쳐 변동 없이 3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축소 개편

문체부는 나라 전체를 멩들게 한 국정농단 사태와 블랙리스트로 직격탄을 맞았다. 김종덕, 조윤선, 정관주, 김종 등 전직 장·차관 4명이 구속됐고, 현직 실·국장 등 19명의 공무원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받았다.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은 문체부는 사활을 건 조직쇄신에 나섰다. 처음 블랙리스트 규명에 앞장섰던 도종환 의원(시인)이 6월부터 문체부 장관을 맡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 전횡의

대표적 피해자인 노태강 전 체육국장이 2차관으로 발탁됐다.

9월 문체부는 방만한 조직을 슬림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행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본부 조직을 기존 7실(室)에서 4실 5국(局) 체제로 바꾸는 조직개편과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실,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이 사라지고 대신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이 생겼다. 장·차관 아래 최고위직인 실장급(1급) 직위 3개가 자연스럽게 줄었다.

주요 통상 협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문화통상협력과'와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고령화 등 새로운 정책 의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문화전략팀'을 신설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전말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문체부 산하 민간 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7월 31일 출범했다.

진상조사위는 문체부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17명 등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민중미술가 신학철 화백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운영 기간은 6개월이고 필요하면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위는 출범 5개월 만인 12월 2천670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 사례는 특검과 감사원이 밝힌 400여 건을 크게 웃돌았다.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은 1천12명, 단체는 320개에 달했다.

조사 도중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뤄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소문만 무성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문화예술인 사찰과 탄압 사실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사실로 밝혀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로 인해 당초 박근혜 정부를 표적으로 했던 조사 대상 시기가 이명박 정부까지 약 10년간으로 늘어났다.

진상조사위는 피해 조사 외에 앞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과 블랙리스트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 블랙리스트 예술인 지원 재개...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던 문화예술인과 공연에 대한 지원이 재개됐다.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개한 '공연예술 창작산실' 지원작에는 앞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극단 하땅세, 놀땅, 백수광부의 작품이 포함됐다.

해외행사참가 지원 등에서 배제됐던 블랙리스트 문인 안도현, 천양희 시인, 김애란 소설가는 한국문화번역원의 초청으로 터키 이스탄불국제도서전에 참가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부 지원이 끊겼던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와 대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서울연극제도 다시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부당하게 폐지·축소됐던 문화예술지원사업 일부가 복구됐으며 2018년까지 모두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위해 총 104억3천만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을 마련해 승인했다.

'우수문예지 발간지원사업'은 1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약 2년 만에 되살아나게 됐다. 이 사업은 2017년 지원 예산이 아예 책정되지 않았다가 새 정부 출범 후 뒤늦게 체육기금에서 5억원을 긴급 투입해 명맥을 이었다. 문학작품에 창작 지원금을 주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3억원 이하로 줄었던 예산이 다시 10억원으로 늘어났다.

소극장을 지원하는 '특성화극장 지원사업'도 10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제 궤도에 오르게 됐다. 공연예술단체들에 대한 관료를 지원하는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은 33억원의 예산이 정식으로 책정됐고, '국제영화제 지원사업'은 40억8천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오랫동안 방치돼 바닥을 드러낸 문화예술진흥기금도 확충 방안이 마련됐다. 2018년 복권기금 등에서 1천821억원을 지원받고 국고에서 직접 500억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앞으로 타기금 법정 전입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새로운 문화정책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문화융성'이란 화려한 수사 뒤에 부정 부패가 난무했던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을 바로 세우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사업인 문화창조융합벨트는 국정농단의 대표 사례로 지목되면서 해체됐다. 대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생활문화, 예술인의 생존과 창작을 보장하는 예술인 복지, 문화예술에 대한 간섭을 차단하는 공정한 문



▲ 도중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월 7일 오전 서울 대학로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문화비전2030'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화행정이 새로운 문화정책의 목표가 됐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을 막는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1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술가들을 정치적 압력과 검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예술가 권익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긴급한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예술인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실업급여 혜택을 제공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2019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새로운 문화정책의 기조로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를 제시했다. 도 장관은 12월 새 문화정책 수립 방향과 세부 계획을 공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중시하는 문화가 중심"이라며 "진보 10년, 보수 10년의 대립과 반목을 넘어서는 미래적인 문화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개정 도서정가제 3년...현행체제 유지 합의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11월로 시행 3년째를 맞았다.

도서정가제는 서점과 출판계에 만연했던 과당 가격 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온라인서점에 밀려 고사 상태였던 중소형 서점들에 활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제휴카드, 무료 배송, 경품을 이용한 편집 할인과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책이 중고로 둔갑해 할인 판매되는 등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출판·서점업계와 소비자단체는 1년 가까운 협의 과정을 거쳐 현행 도서정가제를 변동 없이 3년 더 유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한 채 업계 내부의 자율협약을 통해 보완·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문체부 장관이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한령 불구 문화콘텐츠 수출 호조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촉발된 중국의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콘텐츠산

업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7년 콘텐츠 수출액은 67억4천만 달러(잠정치)로 2016년(62억1천만 달러)보다 8.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콘텐츠 수출은 5년간 연평균 8.0%의 성장률을 유지했다.

사드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내는 모바일게임의 성장 등에 힘입어 게임 수출이 선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게임 수출은 2016년보다 9.3% 증가한 37억7천만 달러로 전체 콘텐츠 수출의 55.9%를 차지했다. 캐릭터와 지식정보(인터넷포털·인공지능) 수출도 7.4%와 9.5% 증가해 기여도가 컸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2017년 전체 매출액은 110조5천억원(잠정치)으로 2016년(105조7천억원)보다 4.5%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지식정보(9.2%), 음악(8.1%), 캐릭터(7.8%), 게임(6.7%)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대중매체

신문

■ 우리나라 뉴스 신뢰도 세계 36개국 중 ‘꼴찌’

우리나라 국민의 뉴스 신뢰도가 세계 36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7년 11월 23일 공개한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총 36개국 7만1천805명(국내 2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국내 대부분의 뉴스를 신뢰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36개국 전체 조사 대상자의 43%가 ‘동의한다’고 답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26%보다 높았다. 반면 한국은 그리스와 함께 23%가 동의한다고 답해 검열제도 때문에 언론 자유가 취약한 말레이시아(29%), 정부와 언론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슬로바키아(27%)보다도 낮았다.

정치 성향별로 ‘주로 의존하는 뉴스 출처가 어디인지’ 선택하게 한 결과, 디지털 미디어를 꼽은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진보층이 47%, 보수층이 43%로 비슷했다.

뉴스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62%)였으며 브라질(60%), 포르투갈(58%)도 높은 편에 속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보와 보수 간 디지털 미디어 뉴스 의존도 격차는 각각 52%와 39%로 세계 평균보다 컸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뉴스 의존도는 진보가 57%로, 보수 32%보다 25%포인트나 높았다.

■ 뉴스 신뢰도 소폭 상승…종이신문 읽는 비율 10%대로 하락

2017년 우리나라 뉴스 매체와 언론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016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신문을 읽는 비율(신문 열독률)은 매년 꾸준히 줄어 2017년 처음으로

10%대로 하락했으며 모바일을 통해 뉴스를 보는 비율은 소폭 늘어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2017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뉴스 미디어 신뢰도는 메시징 서비스와 SNS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 2016년보다 높아졌다.

매체별로는 지상파TV의 신뢰도가 5점 만점에 4.07점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편성채널(4.02점), 보도전문채널(3.94점), 뉴스통신(3.75점), 경제 및 전문신문(3.67점), 라디오방송(3.64점), 포털(3.59점), 전국종합신문(3.57점) 순으로 조사됐다. SNS 뉴스의 신뢰도는 2.9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메시징 서비스(3.03점)와 인터넷신문(3.27점)의 신뢰도도 낮은 편에 속했다.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에 3.11점으로 2016년보다 0.41점 상승했다.

2017년 신문 열독률은 2016년의 20.9%보다 4.2%포인트 하락한 16.7%로 집계됐다. 신문 열독률의 감소로 결합 열독률(일주일간 신문기사를 종이신문, PC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일반 휴대전화, IPTV 등 다섯 가지 경로 중 한 가지 이상에서 이용했다고 답한 비율)도 2016년 81.8%에서 2.8%포인트 하락한 79.0%로 나타났다.

미디어별 이용률은 TV가 93.2%로 가장 높았고 모바일과 메시징 서비스가 각각 82.3%와 66.2%로 그 뒤를 이었다. 모바일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2016년의 70.9%보다 소폭 증가한 73.2%였으며 20~40대의 모바일 뉴스 이용률은 20대 94.2%, 30대 93.1%, 40대 88.1%로 평균 90%에 달했다.

■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사임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이 2017년 3월 19일 사임했다. 홍 회장은 사임 전날 임직원에게 이메일로 고별사를 보내고 사임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탄핵 정국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고 사임 사유를 밝혔다.

중앙미디어그룹에서 홍 회장의 아들인 홍정도 사장이 2015년 12월부터 중앙일보와 JTBC의 대표이사 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홍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세계은행(BRD) 경제개발연구소 경제조사역, 재무부 장관비서관, 대통령비서실 보좌관, 삼성코닝 부사장 등을 거쳐 1994년 중앙일보 사장으로 취임했다.

1999년부터 중앙일보 회장을 맡아오다 2011년부터 JTBC 회장을 겸임했다. 세계신문협회(WAN) 회장, 한국신문협회 회장, 주미 대사 등도 지냈다.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의 처남이기도 하다.

■ 2016년 종이·인터넷 매출 0.3% 줄고 종사자는 0.5% 증가

2016년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매출액을 합산한 신문산업 전체 매출액은 3조6천514억원으로 2015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17 신문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일간신문의 매출액은 2조7천993억원으로 전체